
	<h1>보 도 자 료</h1> <h2>10.19(월) 조간부터 보도 가능</h2>	
--	---	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,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·보험상품감독국			
책 임 자	[금융위원회] 이동훈 과장(02-2156-9830)	담 당 자	[금융위원회] 김선문 사무관 (02-2156-9831) 임형준 사무관 (02-2156-9832) 권기순 사무관 (02-2156-9835)	
	[금융감독원] 진태국 국장(02-3145-7460) 조운근 국장(02-3145-8220)		[금융감독원] 이창욱 부국장 (02-3145-7450) 박종각 팀장 (02-3145-8231)	
배 포 일	2015.10.16.(金)	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7매

제 목 : 사전규제 → 사후감독으로 보험규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.
경쟁과 혁신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.

「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」 마련

- 22년만에 보험상품·자산운용 자유화 조치를 통해 국제 정합성있는 규율체계 마련
⇒ 판매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 → 상품·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 전환
- 이에 상응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후감독 강화

- 상품개발·자산운용 관련 사전적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여 질적 경쟁 촉진
 - (상품개발) 인가제적 운영 요소와 사전신고제·표준약관 폐지 등
 - (상품가격) 위험을 및 이자율(할인율) 등 경쟁저해 요인 전면 재정비 등
 - (자산운용) 직접적·사전적 규제 폐지,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 허용 등
-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제고를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
 - 부실상품 개발·판매시 과징금 엄중 부과, 불완전 판매 행위 제재 강화 등
 - IFRS4 2단계 도입 준비를 통한 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
- 10월중 입법예고, '16년초부터 즉시 시행(다만, 일부 과제는 순차적 추진)

1. 추진 배경

- 2000년대 이후 한국 보험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여, 세계 8위 보험시장으로 도약하며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 담당
 - * 14년말 보험권 자산 862조원(은행 2,558조원), 종사자 44만명(은행 12만명)
 - * 14년말 자동차보험 약 2천만대 계약, 실손의료보험 약 3천만명 가입 등
- 그러나 상품개발·자산운용 등에 대한 사전적 규제로 판매채널에 의존한 양적 경쟁에만 치중하면서, 질적 성장은 근본적 한계에 직면
 - 불완전판매·보험사기 등에 따른 사회전반의 부정적 인식도 확산
- 이에 기존의 “양적 성장”을 “질적 성장”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보험산업에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하에, 「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(2015~2017)」을 마련

→ '15.5월중 민관합동TF를 구성하여 업계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(5~9월중 총 20회 회의개최)한 후, 금융개혁자문단(10.8일) 및 금융개혁회의(9.24일, 10.14일)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

2. 주요 내용

1 「사전적 규제 → 사후감독 전환」 ⇒ 경쟁과 혁신 촉진

가.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

- 원칙적으로 현행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,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신고제의 적용·심사 기준 명확화(1)

(i) 의무보험 및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 등에만 사전 신고제를 유지하고, 여타 상품들은 사후보고로 전환

(ii) 현행 시행령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상품 신고 심사기준의 인가제적 운영요소 정비

☐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**표준약관제도 재정비**(②)

(i) 원칙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(시행세칙)을 폐지하고, 소비자 보호 등 필요사항은 약관준수 사항 등으로 규정등에서 규범화

(ii) 다만, 실손·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, 타업권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*

* 협회내 상품심의위원회(후술)가 표준약관(안)을 만들어 금감원에 신고

☐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나 다양한 상품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**상품 신고기준 등 과도한 사전적 설계기준 삭제**(③)

나. 상품가격 다양성 확대

☐ 타업권이나 국제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 **위험요율 관련 규제를 전면 재정비**(⑦~⑨)

(i) 보험회사 스스로의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하도록 뒷받침

(ii)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($\pm 25\%$) 폐지

(iii) 새로운 위험보장을 위한 상품개발시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할증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((현행) 30% → (16년) 50% → (17년) 폐지)

☐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**이자율(할인율)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**(⑩~⑪)

(i) 표준이율 산출제도를 폐지하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결정하도록 유도

(ii)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 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((현행) $\pm 20\%$ → (16년) $\pm 30\%$ → (17년) 폐지)

다.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

☐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을 **현행 '사전적·직접적 통제' → 사후적·간접적 감독' 방식으로 전환**(⑮~⑰)

(i) 현재 사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 규제 폐지(단, 대주주 관련 자산운용비율 규제는 유지)

(ii) 급변하는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외국환 및 파생 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 개편

☐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,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등 **보험회사의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 허용**(⑱~⑲)

라.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

☐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**보험가입 절차를 전면 재정비**(⑳~㉔)

(i) 온라인 환경에서 가입단계별 절차를 통합·단순화하고, 여행자 보험 등 간단한 보험의 경우에도 대면가입 서류 대폭 간소화

(iii) 상품안내자료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확인·서명방식을 대폭 간소화 하되, 해피콜제도는 장기보장성보험까지 확대

□ 소득수준 제고에 따라 다양한 위험보장수요가 나타나는 만큼, 이에 걸맞는 **보험회사의 종합 리스크 관리역량 확충 유도**(^[27]~^[28])

(i) 일반손해보험 영역에 특화된 보험회사 신규진입 허용 등을 통해 장기 저축성 상품 위주의 성장전략 탈피 유도

(ii) 보험회사 자체적인 보험요율 산출 허용 등 기업성 보험 개발의 자율성 제고를 통한 시장 활성화 도모

2 사후적 감독 강화 ⇨ 소비자 보호 & 건전성 제고

가.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

□ 부실상품 판매시 보험회사에 대한 사후적 책임 대폭 강화(^[4])

○ 법규를 위배하여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 개발·판매시, **상품변경권고권 발동과 병행하여 사유공개 및 과징금 엄중 부과**

○ 이를 위해 법규상 과징금 부과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전면 개편하여 **금융당국의 사후적 상품 감독 기능 강화**

□ 상품자율화에 따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(실손·자동차보험)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유지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(^[5])

○ 각계 전문가·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는 「(가칭)상품심의위원회(협회)」를 설치·운영

○ 동 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·조정하여 표준약관(안)을 마련한 후 금감원에 신고

□ 가격규제 정비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(^[12]~^[13])

○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관련 위험률 조정한도 규제 ($\pm 25\%$)는 2년이상 걸쳐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일괄적인 가격 상승 차단

- (16년) $\pm 30\%$, (17년) $\pm 35\%$, (18년 이후) 제반여건을 보아가며 폐지 여부 결정

○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활용한 **보험상품 비교·공시를 대폭 확대 하여 소비자의 정보취득 용이성 및 상품 선택권 제고**

- 금년 11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오픈

- 내년부터 인터넷 포털 등에 비교·공시정보 전면 개방

- 온라인에 적합한 표준화·규격화 된 상품개발

- 온라인 전용상품의 사업비 직접 공시 등

□ 불완전판매 및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·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**일부 보험대리점·설계사에 대한 규율 강화**(^[21], ^[23])

* (예) 보험대리점에 대한 3개 이상 상품설명 의무 부과, 부당수수료 수취금지 규정 신설,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한 대면교육 의무부과 등

○ 판매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또는 기존계약 부당 해지(승환)시 과징금·과태료 등 금전제재 강화

-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상향조정(현행대비 20~30%가중)

-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건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 마련 등

○ 전속대리점의 불완전 판매시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

○ 보험금 지급청구부터 지급(또는 지급거절)까지 단계별 설명의무를 부과(보험금 지급기준)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

□ 대형 법인보험대리점(GA)의 보험상품중개업자 전환 등을 통해 상품 판매에 대한 권한·책임 명확화 및 관리·감독 강화 추진(22)

* (예) 보험회사에 준하는 자본금, 인력·설비 및 대주주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규율하고 겸영·자회사 규제를 부과하고 불완전 판매시 책임 부과

나.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

□ 가격 덤핑 및 자산운용 리스크 확대 등에 대비하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(14, 20)

○ 보험회사의 위험선호적 경영행태 등이 RBC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화하여 급격한 보험회사 부실화 방지

* (예) 특정자산 집중투자시 RBC 위험계수를 상향조정하여 추가적으로 자본확충토록 함

○ IFRS4 2단계 도입을 대비하여 주요국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국내 도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

- 적정한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부채시가평가(LAT)제도를 지속 강화

- IFRS4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정비* 및 보험회사의 자율적 자본확충 노력 유도

* (예)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을 구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 등

3. 기대 효과

□ 보험산업의 경쟁촉진 및 신뢰회복을 통해 우리 보험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○ (보험회사)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이고 가격 차별성도 없는 유사한 상품으로 판매·마케팅 경쟁에 치중하던 시대에서, **혁신적이고 새로운 상품·서비스가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“질적 경쟁”의 시대로 전환**

○ (소비자) 새로운 상품·서비스를 **보다 손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편익이 증대**

○ (금융감독) 사전적 규제가 폐지되고 사후적으로 부당행위나 부실 경영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의 **“paradigm shift” 실현**

⇒ 궁극적으로 한국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4. 향후 계획

□ 개혁과제 중 시행령/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는 10월중 입법예고하여 16년초부터 속도감있게 시행

○ 다만,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과제들은 정교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순차적·단계적으로 추진

○ 이와 함께 법개정 필요과제는 추가검토를 거쳐 16년 상반기중 법안을 마련하고 20대 국회에 제출·통과 추진

[별첨1]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

[별첨2] 로드맵 세부 과제

[별첨3] 질의·응답(Q&A)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넓게 들겠습니다
바르게 알려겠습니다